

담배 냄새 날마다 고통받는데...가해자는 '나몰라라'

식막한 아파트 문화 공동체 정신 살리자

<중> 무개념 흡연·분리수거

광주시 서구 쌍촌동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김민정(가명·여·46)씨는 담배냄새 때문에 매일 고통스럽다. 김씨 집에서 흡연자는 없다. 하지만 매일 집안에 담배냄새가 끊임없이 올라온다.

김씨는 17층에 산다. 지상이 아닌, 화장실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담배 냄새로 의심이 되지만 아랫집인지, 옆집인지 명확하게 밝혀내기도 쉽지 않아 속앓이만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흡연 금지 방송을 요청하는 게 전부다. 방송을 통해 협조를 구하더라도 따라주지 않으면 그 뿐이다. 담배냄새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 문흥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직장인 정씨는 아침 출근길부터 얼굴을 찌뿌릴 때가 많다.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함에 버리려 가면서 엘리베이터 바닥에 흘려놓은 탕인데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인데도 물기를 닦아내고 버린다거나 그릇 등으로 받치고 버려야 한다는 '기본적 상식'도 없는 이웃이 있다는 생각에 화가 치민다.

정씨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려 나올 때 충분히 물기를 닦아 흘려 나오지 않게 해야 하는데 대충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괴롭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많은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사는 공동주택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행동으로 이웃 간 발생하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층간 소음 뿐 아니라 흡연, 쓰레기 분리수

간접흡연 민원 2배 이상 급증
사소한 다툼서 물리적 폭력까지
금연아파트 지정해도 무용지물
쓰레기 분리배출 제대로 안시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 갖춰야

거 등도 갈등을 촉발시키는 이유로 꼽힌다.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하다가도 물리적 폭력까지 몰고가는 큰 갈등으로 퍼져나가고, 공용계단 및 복도에서 나는 담배 냄새가 아파트 전체로 퍼져나가 이웃 간 분쟁의 씨앗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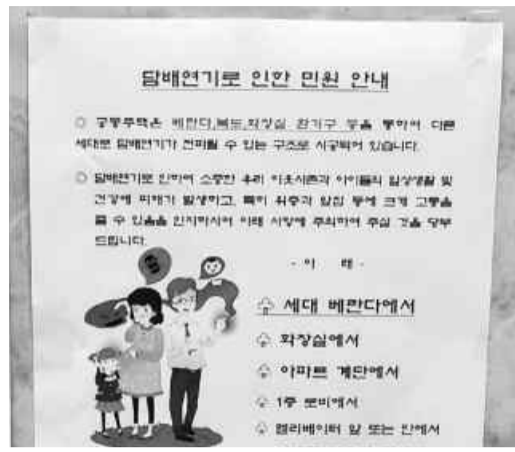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제기된 간접흡연 민원은 256건으로 전년도(114건)에 비해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광주·전남 지역도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관련 민원이 접수되는 실정이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아파트화장실 등 실내 공간에서 담배를 피웠을 때 오염물질(니코틴, 미세 먼지 등)이 5분 안에 위·아래층으로 확산된다면서 아파트 실내에서는 절대로 금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금연아파트도 지정, 운영중이다.

지난 7월말 기준 광주지역 1173개 단지(43만 8023세대) 아파트 중 73곳(동구 9곳, 서구 6곳, 남구 18곳, 북구 16곳, 광산구 24곳)이 금연아파트



아파트 관리 사무소가 층간흡연 자제를 당부하면서 아파트 현관에 붙인 안내문

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단지는 금연구역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도록 금지하는 등 1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아파트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더라도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용 공간으로 한정될 뿐 세대 내는 해당되지 않으니 집 안 발코니나 베란다에서 피우는 경우 제지할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실내 흡연에 대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과 아파트 관리 주체 측이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측이 선뜻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정책이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주민 간 얼굴을 붉히는 원인이 된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을 시작으로 2002년 '분리배출 표시 제도'에 관한 지침(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분리배출을 의무화 했다.



지난 28일 밤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투명 플라스틱 분리수거장에 일부 투명 페트병 이상표비닐이 제거되지 않은 채 버려져 있다.

문제는 일부 입주민의 경우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자칫 주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수거가 안 되는 품목을 그대로 버리는 가 하면, 신고 후 요금을 납부하고 폐기처리 해야 하는 대형 생활쓰레기조차 몰래 버리는 주민도 있어 아파트 경비원들이 난감해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택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실태파악을 위한 경비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아파트 주민들의 쓰레기 분리배출 인지도가 여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분리수거장에서 재활용 물건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입주민을 봤다"면서 "결국, 우리 경비원들이 일일이 다시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투명페트(PET)병 분리 배출 의무화도 정착되

지 않았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치킨 뼈는 일반쓰레기인데, 아무렇지 않게 음식물로 분류해 버리고 남은 배달음식을 그대로 재활용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행태도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개인 양심에 맡기는 것 외에도 지자체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측이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정비해 갈등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만드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아파트 경비원은 "원래 아파트에서 음식물 쓰레기 배출요령은 물기를 제거하고 전용 배출기에 배출하는 게 맞다"면서 "이물질, 생채소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철 없는 가해학생들 "때렸지만 죄 되는 줄 몰랐다"

광주지법 '학폭 사망 사건' 재판 가해학생 9명 반성한다 말 안해 유가족들은 방청석에서 울먹

'때리긴 했지만 폭행(죄)이 되는 줄 몰랐다, 고의는 없었다, 장난친 것.'

29일 오전 9시50분 광주지법 301호 형사법정. 옛된 얼굴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황토색 수의를 입은 남성 등 10명이 법정에 들어섰다. 지난 6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교생에게 폭행·강요·상습폭행·상해 등의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명의 가해학생들이다. 피해 학생의 자살은 교육부가 관련법 개정, 학교폭력 조기감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 학교폭력전

담경찰관 추가지정, 피해학생 치유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우리 사회에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 위험성을 재차 드러낸 사건으로 꼽힌다.

10명의 가해 학생들 중 7명은 교복을 입고 들어섰고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은 A·B 학생은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다. 이들은 판사의 질문에 답변할 때를 빼고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았다.

오전 10시 법정에 들어선 형사 11부(부장판사 정지선) 재판부 A군 등에게 직업과 주거지, 본적을 물었고 공소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8명의 학생을 제외한 A·B군은 "학생이나"고 묻는 판사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이여 검찰이 이들의 공소사실을 열거하기 시작했다. "교실 바닥에 눕히고 손과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하고 목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고 피해

학생을 촬영했다", "뺨집이 좋다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욕하고 때릴 듯 검주머 웃을 벗기려 하는 등 추행하고...", "뺨을 수차례 때리고 얼굴에 낙서하고...", "머리에 올라탄 채 목마를 태우고 돌아다니도록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욕설을 하고...". 방청석에 있던 피해학생 유가족들은 검사 가 공소사실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아들이, 조카가, 오빠가 겪었을 고통이 떠오르는 듯 울먹였다.

재판부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법정에 선 학생들에게 물었다. 학생들의 변호인들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때린 사실이 없다", "때리긴 했지만 폭행(형법상)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욕설하는 등 피해학생이 도발해서 방어진원에서 이뤄진 것" 등의 취지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학생들도 판사에게 변호인과 동일한 의견이라고 답했다.

유가족들은 기가찬 듯 방청석에서 신음을 토해냈다. 재판이 끝난 뒤 피해학생 유가족들은 법정 밖에서 "학생들 변호인들이 접촉이 있어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우리 아이가 먼저 도발을 하고 욕해서 그랬다는 식의 변론을 듣는데 어찌구무가 없었다"면서 "우리 아이가 죽어 아무말도 못하니 자기를 유리한 대로 마음대로 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명 외에는 9명의 가해학생들 사이에서는 "반성한다"는 취지의 말도 들리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유가족들은 "자기를 변호에만 급급, 반성하고 사죄하는 말은 하지 않고 뻔뻔한 모습에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다음달 5일 증인들을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고 일부 학생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을 별도로 열어 심리할 쟁점사항을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중대재해법 시행령 통과에 민주노총 "반쪽짜리 전략"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노동계에서는 '직업성 질병' 인정과 '노동감독의 민간위탁 금지' 등 가장 시급한 사안이 빠진 졸속 추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는 29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통과에 대해 노동자, 시민의 죽음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의 시행령이 반쪽짜리 전략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사고 등 반영할 것을 요청했던 내용들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통과됐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개정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p>상가매매 (상무지구)</p> <p>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p> <p>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p> <p>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p> <p>(사무실 리모델링, 배, 유층, 모든업종가능 즉시임주 시비없음)</p> <p>010-6670-9800</p>	<p>장성 토지(매매 분양)</p> <p>광주에서 20분(6M도로접)</p> <p>장성댐 (호) 2분,</p> <p>장성 IC. 5분</p> <p>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p> <p>[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p> <p>010-6670-9800</p>
---	---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